

친환경적인 산림경영으로 새로운 “인프라” 형성해야 한다.

김 재 현 / 임업연구원 환경부

최근 외환위기로 야기된 IMF 경제 체제는 전산업분야의 경제주체들에게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고, 산업별로 내부화작업을 위한 구조 조정작업과 효율향상을 위한 성과제 도입등이 논의되고 있다.

산림 자원부족으로 대부분의 목재와 펄프재 등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연간 50억\$ 이상의 외화를 쓰고 있는 임산업 분야도 예외없이 산업구조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산림관련 사업은 국토의 65%를 관리하는 조방적인 면적체계에서 볼수 있드시 그 성과가 다기능으로 분화되어 나타나고 있어, 작업과정별로 한계가 애매한 부분이 많고 그 결과물이 가시적으로 집약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산림은 본래 경제원칙을 기초로 하여

자연 발생 또는 또는 인위적으로 발달될 수 있고,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인드 즉, 경영능력, 자본, 노동, 기술 등을 조합하는 능력으로 대표할 수 있다. 토지산업인 산림의 생산체계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힘을 모으고 합심해서 그룹집단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경영적마인드를 형성하고 조직화 시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능동적인 활동체를 구성해 산업적 동기가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

임산업의 주된 활동영역인 산림은 경제기능과 더불어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특수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 효과만을 분석할 때 타산업에 비해 미진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21세기에는 이와같은 환경적요소들이 재화로써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

어, 산림자원의 승수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어 첨단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SOC자본을 형성하는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임업인 모두는 이러한 매카니즘을 잘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은 마인드가 기초가 된 임산업의 재투자 패턴이 형성되면 산촌경제의 틀인 다목적 경영구조에 연결되는 수확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다루는 산림 주무부처와 예산심의담당부서는 정부정책의 우선과제로 삼아 발전시켜야 한다.

최근 환경학자들이 주장하는 논리의 다수는 이와같은 배경을 기초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시대적 당위성이 마련되었다 할 수 있다.

과거 16세기 이후 급속한 산업 사회 육성에 따른 보속경제 논리가 바로 이러한 바탕아래 발전되어 왔으며, 산림이 공급할 수 있는 맑은물, 맑은공기, 홍수저감 등의 각종 공익기능(한국을 기준으로 연간 36조원·'95년말 기준)이 케인즈, Hicks등의 고전적 경제학자들에 의해 주장된 고전적 재화논리의 영역을 깨는 획기적인 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듀어 등이 주도하는 환경을 연구하는 모임들을 중심으로 이들 분류체계의 잘못을 지적하고 환경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의 중요성이 강조된 오늘날에는 산림을 환경재화의 기초적인 재생산 자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들 산업이 21세기를 주도하는 미래산업으로 각광받을 수 있고 새로운 산업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정부의 중심부에도 이와같은 산림 관리전문가를 활용하는 정책적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주무부처에서 이러한 배경을 기초로 한 행정의 기본틀을 만들어야 하나, 예산부족 등으로 아직 그 틀을 짜지 못하고 있음이 안스럽고 더욱이 작은 정부건설을 위해 산림 관련기관의 축소가 검토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는 치산치수에 있음과 산림을 가꾸고 보존하는 일의 중요성을 위정자들 마다 역설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채 후임자에게 위양하는 실정으로 산업모델을 만들지 못하고 늘 허둥대다 소의 되는 한국적 현실이 안타깝다.

오늘날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

고 있는 지속 가능한 산림보전과 경영 관리에 핵심을 맞춰 임산업 모형을 마련한다면 삶의 질 향상에 역동적인 활동영역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이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고, 복지 사회의 목표인 인간의 삶의 질향상을 질서있게 추진하여 적극 대처할 필요가 크다. 정부정책은 IMF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전문화, 종합화, 다양화를 지향하는 기능별 구조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임산업 분야의 투자예산이 균형을 이루고, 단기적 경제가치 창출보다는 장기적인 효용가치 창출을 더 많이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투자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일정비율 이상 증가시키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정책결정자들은 이를 위해 끈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사회발전과 더불어 환경보전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 한다.

이를 위해 임산업이 내재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되는 생산기술 등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파악하고, 실무적인 면에서 고용창출 노력이 필요하고 합목적적인 내부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

항들을 정리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 산업체계의 21세기 산림 산업모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산림이 법정상태를 유지한다면 다목적 경영형태별로 매년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그 수익을 이용해 각종 임산업을 년차별 배분계획에 따라 수립할 수 있으나, 현재의 우리 산림은 ha당 평균축적 50m³이라는 외형적 수치에도 불구하고 목재자급률 7%에 그쳐, 생산을 위한 산업형태로 보기에는 불충분하기 그지 없다. 그렇다고 대차대조에 의한 손익을 따져 어려운 산림 관리사업을 계속하여야 하겠느냐는 일반 국민들의 자조섞인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21세기를 대비하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짜야 할 시점에 있다.

더욱이 지속가능한 산림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 산림개발을 통한 경제적이익의 일부를 국가라는 매개체를 통해 임업으로 환류될수 있도록 국가의 보전적 행정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산림경영자와 10만 관련 노동자그룹들에게 적정하게 배분될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